"尹에 남은건 '구속' '파면' 뿐…철저한 진상 조사 이뤄져야"

관저에서 극우 유튜버·지지자 선동하고 '자진 출두 주장' 어이없어 5·18 관계자들 "헌정 질서 파괴한 계엄사태 주범들 강력 처벌해야"

광주·전남 시민 반응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되자 광주·전남 지역 민들은 환영 입장을 밝히는 한편 철저한 진상 조사 가 뒤따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역민들은 국 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윤 대통령에게 남은 건 '구 속'과 '파면'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이후 43일만에 체포가이뤄져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한편, 이번 사건이 "헌정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광주 시민 유덕경(30)씨는 "관저에 틀어박혀 극 우 유튜버와 지지자를 선동하던 끝에 드디어 체포 되는구나 싶었는데, 경호차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 니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수갑을 차고 끌려나오는 모습을 보이길 바랐지만 어찌됐든 체포가 됐으니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동구 계림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고건 회(여·58)씨는 "뒤늦게라도 체포되면서 한 발짝 나아간 듯해 다행이기도 하고, 윤 대통령의 뻔뻔한 태도에 화가 나기도 한다"며 "나라가 어지러우면 손님들이 체감상 20~30%씩 줄어드는 것 같다. 이 사태가 빨리 마무리돼야 경기도 좀 나아질 텐데 걱정이다"고 한숨을 쉬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18 당시 계엄령 트라 우마를 떠올린 5·18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을 비롯 한 계엄 사태 관계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 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5·18민주화운동 3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공로 자회)와 5·18기념재단은 1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 한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법망을 교묘히 피 해 온 그의 모든 행적을 명백히 밝혀 흔들림 없는 공정성과 정의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

양재혁 5·18유족회장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안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것 은 지난 수년간 잃어버린 정의와 원칙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윤 대통령뿐 아니라 내란 동조 자들에 대한 조사까지 속히 이뤄지고, 헌재 또한 신 속한 판단으로 국가를 안정시켜야 한다. 내란수괴 를 따르는 국민의힘과 지지자들의 국민 분열 행위 는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관련자들 일부만 단죄한다면 하수인들이 살아남아 헌법을 개정할 때까지 방해 공작을 일삼는 등 전두환 군부 독재를 청산하지 못한 것과 똑같은 꼴이 될 것"이라며 "관련자들을 철저히 단죄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새로 출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 엄에 동조한 이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 리르 노여F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광주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달 넘게 도망치던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이 드디어 체포됐다"며 "추악한 궤변으로 법치주의를 유린했던 윤 대통령의 체포는 대한민국 국격 회복과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류봉식 광주비상행동 공동대표는 "공수처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태도에서 벗어나 반드시 윤 대통령을 구속하고, 내란 공범자들을 일망타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해 왔던 모든 행위들에 대해 철저하게 죄질을 따져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게 만든 행위들을 철저히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창민 광주전남촛불행동 사무국장도 "윤 대통령 체포는 매주 광장에 나오고, 매일 밤 한남동에서 밤을 새운 국민이 이끌어낸 결과"라며 "공수처가 1차 체포에 실패했을 때 수사가 지지부진해지고 극우 세력이 의기양양하게 내란을 정당화하던 행태를 반면교사 삼아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은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를 불법이라 주장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내란 혐의를 받는 대통령은 특별 한 처우를 요구하지 말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 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노동자들은 한 목소리로 여당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15일 광주시의회 앞에서 윤석열정권 즉각퇴진 사회 대개혁 광주비상행동 관계자들이 윤석열 체포 관련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내란 44일, 국민을 분노와 불면으로 내몰았던 시간 동안 국민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며 "우리가 몰아내야 할 대상이 윤석열 개인만이 아님을 확인했다. 윤석열과 그의 손발인 국민의힘은 해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도 성명서를 통해 "폭력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한 자는 다시

나타나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와 모두의 안위를 위해 윤대통령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면서 "노동자와 민중의 연대가 윤석열을 퇴진의 길로 이끌고, 내란 범 방어에 급급한 국민의힘도 책임지도록 만들겠 다"고 주장했다.

>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현직 대통령 첫 구금"…외신, 尹 대통령 체포에 촉각

"불확실성 뒤 법치 우세 시사" 대립·갈등 속 '새 전개' 주목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직후 관련 기사를 홈페이지 첫 화면 상단에 배치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15일 윤 대통령의 체포 사실을 전하는 기사에서 한국의 불확실성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가디언은 "윤 대통령 체포는 지난 몇주간 많은 한국인이 민주주의의 미래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한국의 최대 동맹국 미국에서도 우려를 불러일으킨 불확실성 이후 법치주의가 우세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는 최초로 체포됐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윤 대통 령 지지자들과 법 집행 당국 간 긴장 속 대치가 일 단 종료됐다고 기사화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윤 대통령의 체포는 지난달 계엄령 사태 이후 촉발된 한국 정치 위기가 또 한 번 뒤틀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FT는 아시아 4번째 경제 대국으로서 한국의 민주적 신

뢰도는 정치 위기 때문에 흔들렸다고 덧붙였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추방, 총살, 탄핵, 투옥: 한국 대통령사'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체포 때문에 한국의 최근 정치 불안정성이 심화했다"면서 "최근 상황 전개는 역사적이긴하지만 추문으로 가득한 한국 대통령사의 최근 사례일 뿐"이라고 적었다.

앞서 대다수 유력 글로벌 매체들은 윤 대통령의 체포 소식을 홈페이지 첫 화면 상단에 배치하며 긴급 보도했다. 영국 BBC 방송은 실시간 영상 및 속보로 윤 대통령 영장 집행 상황을 라이브 업데이트 형식으로 자세히 전했다.

BBC는 "위기가 한국의 분열을 드러낸다"며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윤 대통령 지지자 및체포 촉구 집회 참가자들 간의 구호 경쟁, 경찰과 경호처 직원들의 대치 등을 집중 보도했다.

경호처 직원들의 대치 등을 집중 보도했다. 미국 CNN 방송은 윤 대통령이 체포 소식에 "지 난달 궁지에 몰린 대통령의 충격적인 계엄령 선포 로 시작해 몇 주간 진행됐던 정치적 결전의 최신 사례"라고 언급했다.

WSJ은 당국이 윤 대통령을 체포, 구금했다며 지난달 계엄령 이후 파장이 심화했다고 평했다.

WSJ은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하고, 북한은 최근 미사일을 발사하고,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추락사고로 나라 가 흔들리는 등 결정적인 순간에 한국은 리더십 위 기로 마비됐다고도 보도했다.

영국 더타임스는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 기관들은 전례 없는 정치위기에도 대체로 중립을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경호처는 공무원 신분이지만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의 노력을 방해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본, 중국 언론들도 윤 대통령 체포 소식을 속 보로 비중 있게 전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오전 정규 방송을 중단 하고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들 이 관저를 빠져나가는 화면을 반복해 보여주며 체 포 의미와 전망 등을 분석했다.

중국 최대 포털인 바이두는 관련 속보를 볼 수 있는 타임라인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서비스했다. 바이두와 웨이보(微博·중국판 엑스) 등에선 이 날 새벽부터 윤 대통령 체포 관련 단어가 실시간 인기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체포 직후에는 '윤석 열 체포'가 실시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연합뉴스

"윤석열 체포로 민주주의 마지노선 지켰다"

강기정 시장·김영록 지사, 尹 체포 직후 페이스북 글 올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 록 전남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해 '민주주의의 마지노선을 지켜 냈다'고 평가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 행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 앞에 '더 평등' 했던 대통령이 드디어 체포됐다"며 "응원봉 시민 이 민주주의 마지노선을 지켜낸 것"이라고 밝혔 다. 강 시장은 "이제 다시 시작"이라며 "탄핵과 내 란 가담자 처벌, 그리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향 해 뚜벅뚜벅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자진 출두하지 않고 체포 절차를 밟게 된 데 대해 한층 더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마지막 명예도 지키지 못한 비겁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사필귀정이자 법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 국가의 체통을 지켰다"며 "이제 국민 배반행위의 최종 결과는 헌법재판소 파면(결정)과 구속뿐"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민주당 조인철 "탄핵소추 공무원 보수 삭감 지급"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서구갑)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의 의결로 직무수행이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감액 지급하는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탄핵소추 의결로 인해 직무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 문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보수 전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